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합의하에 7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2005년 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고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왔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정부와 사학단체 및 종교계와의 오해 및 갈등이 완화되고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통한 사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은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 ②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③ 대학평의원회의 일부 기능을 자문사항으로 조정 ④ 이사장의 겸직 제한과 학교장 중임 제한의 완화 ⑤ 임시이사 임기 3년 초과 불가 등이다.

● **로스쿨법 국회 통과**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2009년 3월부터 법조인력 선발·양성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바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한 이래 1999년에도 대통령 자문기구를 통해 제도 도입을 건의했지만 그동안 각계의 입장 차이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한 법률안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파행적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국가별 교육경쟁력 보고서 공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국가별 교육경쟁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교육경쟁력 분야에서 1위를, 한국은 세계 29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11위), 대만(18위), 일본(19위), 홍콩(25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했다.

IMD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학생의 학업성취도(PISA 성적)를 강점 요인으로 지적한 반면,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언어능력이 약점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 부문 세부항목별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상승하였다.

● **대학교목선이수제 전국단위 시범 운영 - 8개 대학에서 수학·물리·화학·생물 강의 개설**

고교생이 여름방학 중 대학에서 수학·물리·화학·생물 등 이공계 과목 학점을 미리 딸 수 있는 '대학교목선이수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8개 대학에서 대학교목선이수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대학교목선이수제는 고교 재학생에게 대학 수준의 교과목 이수기회를 제공하고 이수결과를 대

[2007 IMD 교육 부문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	아이슬란드	12	호주	23	에스토니아	34	이탈리아	45	칠레
2	덴마크	13	미국	24	독일	35	체코	46	태국
3	이스라엘	14	네덜란드	25	홍콩	36	러시아	47	터키
4	벨기에	15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37	폴란드	48	브라질
5	스웨덴	16	룩셈부르크	27	영국	38	불가리아	49	콜롬비아
6	핀란드	17	뉴질랜드	28	포르투갈	39	우크라이나	50	멕시코
7	스위스	18	타이완	29	대한민국	40	루마니아	51	인도네시아
8	캐나다	19	일본	30	스페인	41	크로아티아	52	필리핀
9	노르웨이	20	프랑스	31	말레이시아	42	슬로바키아	53	베네수엘라
10	오스트리아	21	헝가리	32	그리스	43	아르헨티나	54	인도
11	싱가포르	22	리투아니아	33	요르단	44	중국	55	남아프리카공화국

[IMD 교육 부문 순위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현황	순위	현황	순위	현황	순위	현황	순위
통계 지표	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3.571	52	4.0	46	4.0	48	4.6	29
	2.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명)	32.10	56	31.40	54	30.2	56	29.10	52
	3.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명)	20.10	49	18.40	45	17.80	41	17.90	44
	4. 중등학교 취학률(%)	94.7	10	97.2	6	87	33	88.3	27
	5.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39.51	5	41.0	4	47.0	4	49.0	4
	6. PISA 성적(2000) : 수학, 과학(점)	547/552	2, 1	547/552	3, 1	542/538	3, 4	542/538	3, 4
	7. 15세 이상 문맹률(%)	2.1	34	2.1	33	2.1	34	2.0	32
설문 지표	1. 교육제도(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 여부)	3.92	52	4.00	43	4.47	38	4.22	32
	2.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 여부)	3.58	59	4.00	52	4.29	50	4.46	40
	3.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5.5	24	5.89	18	5.64	22	6.57	12
	4. 경제교육(기업의 요구에 부합 여부)	4.58	51	4.85	46	4.86	46	5.47	28
	5. 언어능력(기업의 요구에 부합 여부)	-	-	4.52	38	4.65	35	3.93	44
	6.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여부	5.63	52	6.09	45	4.73	54	6.83	13
	7. 기업과 대학 간 지식 이전의 충분한 정도	4.04	42	5.08	21	4.55	32	5.37	21
조사 대상 국가			60		60		61		55
국가경쟁력 순위			35		29		38		29
교육 부문 순위			44		40		42		29

학 입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대학 과목선이수제 운영 여부 및 학점인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기관 선정, 교육과정 인증, DB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교협은 2007년 시범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운영계획·교육계획 등을 심사하여 8개 교를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과 '학점인정, 이수결과의 대교협 DB 통합관리, 이수결과의 대입연계 활용 및 임의제공 금지' 등 주요 원칙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상지대, KAIST이며, 이들 대학은 여름방학 기간 중 이미 표준 교육과정 이 개발된 수학·물리·화학·생물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고등학생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교육기관별 개설 과목,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학에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입학 전에 이수한 대학 수준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정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 조항 시행 시기가 2008년 1월 1일로 조정됨에 따라 2007년에는 시범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 2006년도 SCI 논문 분석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CD-ROM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2005년도 23,515편보다 765편이 감소한 22,750편으로 논문 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11위를 차지하였다.

논문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순위가 상승한 것은, 전 세계 발표 논문 수가 8.9% 감소(2005년 1,011,363편→2006년 921,591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감소 비율이 3.3%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303,001편을 발표하였고, 영국이 73,351편, 일본이 72,613

편, 독일이 70,095편, 중국이 58,473편 그리고 프랑스가 48,155편 순이다. 우리나라의 논문 증가율은 논문 수 만 편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연구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이 가장 많은 20,808편(75.4%)을 발표했으며, 정부 출연기관에서 4,159편(15.1%), 민간기업에서 2,199편(8.0%), 기타 기관에서 417편(1.5%)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별 현황을 보면, 국내 1위인 서울대가 2005년 3,946편보다 311편 감소된 3,635편을 발표하여 세계 순위는 작년 30위에서 2단계 하락한 32위를 기록했다. 국내 2위를 차지한 연세대(2,025편→1,857편, 세계 104위→106위)는 논문 수와 세계 순위 모두 하락하였고, 3위를 차지한 성균관대(1,568편→1,566편, 세계 159위→146위)의 경우 논문 수는 감소했으나 세계 순위는 13단계 상승하였다. 논문 수 300편 이상 국내 대학은 총 26개교로 이들이 발표한 논문 수 17,806편은 우리나라 전체 발표 논문 수(22,750편)의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6개 대학 중 2005년에 비해 논문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강원대로 논문 발표 수가 283편에서 323편으로 14.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건국대(443편→503편 : 13.5% 상승, 세계 522위→485위), 이화여대(510편→550편 : 7.8% 상승, 세계 471위→448위), 고려대(1,441편→1539편 : 6.8% 상승, 세계 180위→15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 수 300편 이상 국내 대학 중 교수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학기술원이 5.19편으로 2005년에 이어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포스텍 4.07편, 한국과학기술원 3.37편, 서울대 3.15편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학기술원 0.62편, 성균관대 0.50편, 한림대 0.47편 순으로 나타났다.

●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방안 발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은 ①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고 ②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 교(수도권 5, 지방 5)를 육성하며 ③ 교육력 제고 및 산업현장 적합성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 ④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⑤ 정보공개, 구조조정 촉진 및 고등교육 재원의 확충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입전형에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으로 현재 정원의 3.9%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11%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정원의 특별전형 대상이 확대되어 6만 4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세계 수준의 10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예 : BK21 사업단 등)에 첨단 연구기자재, 연구비 및 외국인 교수 초빙을 지원하는 등 우수 연구중심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BK21 사업 등 HRD 사업과 정부 R&D 사업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문과 산업기술의 후속세대를 육성하게 된다.

교육력 제고 및 현장적합성이 높은 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의 가르치는 역량 제고 차원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 대학강의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학문 영역별로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 및 지도교수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제2단계 균형발전과 연계, 주문형 인력 양성을

을 위한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 양성' 부문 중심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타지역 대학과의 교수교류도 지원하며, 지방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 지방대 인문계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혁신 리더로 양성하며, 농촌대학생 기숙사 설립(농림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 채용 시 현지 지방대생 채용 우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력 양성·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권역별 대학구조개혁 역량 지표 적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재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한 고등교육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시스템 혁신 기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계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판정기준 및 선별 지표를 마련하고, 부실 사학 법인의 합병·해산제도를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입학사정관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학생 선발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선발을 유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

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개인환경·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계획에 따라 약 6~9개 대학에 대해 총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은 현장점검 및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2007~2009년)간 매년 2~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생 선발의 기본 방향, 대입전형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자료, 입학사정관제 운영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입학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대학의 제출 자료에 대해 서면 평가 및 인터뷰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지원계획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간 통·폐합, 정원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성과 목표 달성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대학구조개혁 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방안(2004. 12. 28)'에 따라 2005년부터 ① 국립대학 통폐합 사업 ②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 ③ 사립대학 통폐합 사업을 통해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통폐합 국립대학은 통합을 계기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교수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공모를 통해 특성화학과·사업단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중이며,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사회 수요 및 향후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정원 감축·학과(부)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였고 특성화 분야에 학내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교육연구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 IMD 2007년도 국가경쟁력 발표 결과 교육 부문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은 대학 특성화 및 구조개혁 추진이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 예산 518억 4천만 원은 2005, 2006년도에 통폐합을 완료한 6개 국립대학에 총 278억 4천만 원, 10개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총 240억 원 등 기 지원이 확정된 16개 대학에 지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조개혁 및 특성화 추진 등 통폐합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지원 예정액의 20%를 차등 지원하므로 대학은 당초 계획한 구조개혁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대학 법인화법 국무회의 최종 심의·의결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5일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법인화법은 총장이 법인을 대표하여 대학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국립대학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예산 편성·사용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립대학 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법인 전환 이후에도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고등

교육개혁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일부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법인전환으로 인한 정부 재정지원의 축소, 신분불안,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 및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로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고용, 정년 등에서 교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국립대법인화에 따른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국·공립대학을 일시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에 의해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거듭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학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은 늘리고, 대신 규제는 대폭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대학교육력 향상을 위해 ①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을 지원하며 ③ 성과중심의 경쟁체제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CTL)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CTL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10개 권역별 거점 CTL 및 국가 CTL 지정·운영을 통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내 강의 질 제고 및 논문지도 강화를 위하여 우수강의(The Best Lecture Awards) 및 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위의 국제통용성과 인력의 국제이동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학회, 전문가 단체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히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관련 교육과정은 산업계가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사립대학 적립금(5억 7천만 원)의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 투자를 허용하고, 대학 내 유휴부지에 타인 소유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여 교육 목적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현장적합성 있는 인력 양성, 기술개발·이전 등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하고(102개 중 81개 해제), 사립대학의 기본재산 처분시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탈피, 각 대학의 연구·교육 등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채택하여 개별 대학의 특성화 분야·기능에 부합하도록 평가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교육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들 평가결과를 교수정원 배정 및 재정지원 사업 등 행·재정지원 기준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보**